

# 여·야, '에너지 3법' 2월 내 처리 공감대

### 에너지정책 전환 한목소리 고준위방폐장법·전력망확충법 등 이전 크지 않아 논의 속도낼 듯 법안 처리 지연에는 네 탓 공감

‘딥시크 충격’의 여파 속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역시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정부가 전력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5일 각각 전력산업 간담회를 열고서 “전력 소비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략과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관련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국회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에너지 3법에 여야 ‘큰 틀 공감대’=에너지 3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산자위 여야 간사는 이번 달 중순 법안소위 개최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미래 먹거리가 될만한 첨단산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 역시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여야는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해 4월 고준위방폐물법 및 풍력발전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당시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긴 했으나 상당 부분 합의처리에 접근했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해당 법안

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처럼 에너지 3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논의를 거쳐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내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도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 처리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를 찾아 “민주당과 여러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를 협의 중”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 진동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을 주장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활성화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리 지연 두고는 ‘네 탓 공감’=다만 에너지 3법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된 데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에너지 3법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외 특례를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에너지 3법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면서 시급한 에너지 3법 처리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우려해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탓에 법안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다른 시각차가 에너지 3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작동하면서,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당내 경선 네거티브 없는 정책대결 민주당 파이 키워 정권교체에 기여”

## ‘대선 출마’ 김영록 전남지사

조기 대선 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가 1987년 헌법 체제의 개헌 등 대한민국의 재창조와 정치 대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네거티브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정책 대결에 나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식 출마 선언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국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김 지사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신의 조기 대선 민주당 경선 출마와 관련 배경과 입장,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낙후돼 있는 호남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관료사회를 잘 파악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준비된 후보임을 주장했다.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국민의 우려를 넘어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나라를 경제, 문화 등 모든 수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87년 헌법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해방 이후 80년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치유 등에 나서겠다고 사례를 들었다. 권한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



하며, 대통령은 외교·국방, 책임 총리가 내치를 맡도록 하고, 독일의 사례를 검토해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등 견제와 조화의 권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어 다음 정부는 3년 이내에 개헌을 추진하고, 가장 먼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만 지난 경선에서처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생했다”며 “현재 재판중인 사안으로 사법부의 판단이겠지만, 같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은 너무 지엽적이며, 자질구레한 사안으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뻔뻔하다”며 “국민의힘도 극렬세력에게 본의 아니게 끌려다니는데,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윤 대통령, 극렬세력과도 과감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에 대해서는 “국정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 의결을 의면하고 헌법기관의 구성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탄핵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과거 사례도 있는만큼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재선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부장관, 재선 전남지사 등을 거치면서 내놓은 실적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음을 말해줄 것”이라고 재차 자신의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시도민의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시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호남 대변...역량 갖춘 준비된 후보

## 대한민국 재창조·정치 대개혁 앞장 지사직 유지하면서 경선 참여하겠다

고 덧붙혔다.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연대 없이 끝까지 단독 후보로 갈 예정이며, 네거티브 없이 정책 대결로 민주당의 파이 전체를 키워 민주세력이 집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논쟁은 할 수 있지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이 윤 대통령이 있는 수감동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조특, 김용현 상대 ‘구치소 청문회’ 불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민음이 대학 · 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소로 36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민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